

현안과 과제

■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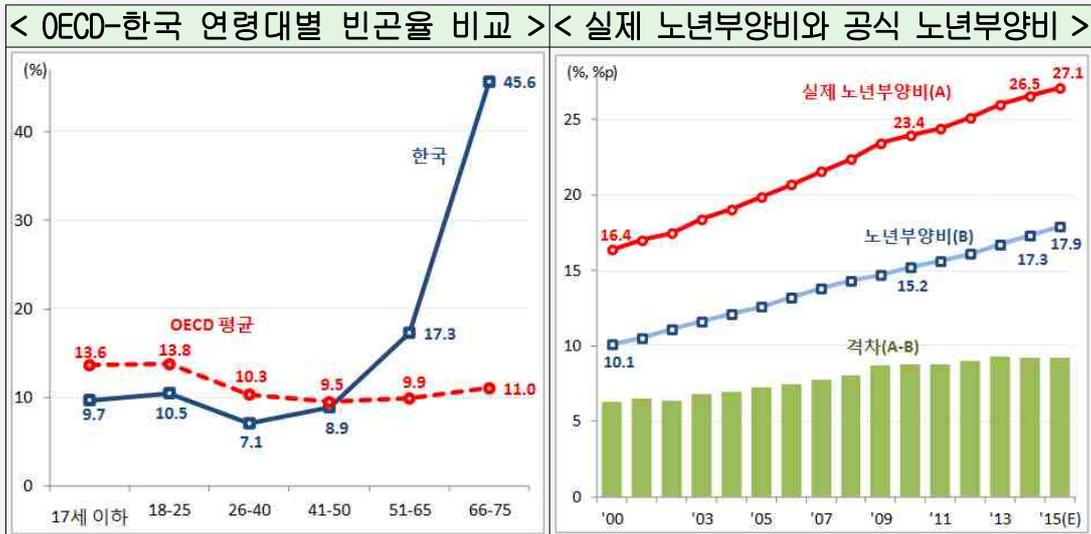
■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부양연령층(15~64세)의 노년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의 '공식 노년부양비($\frac{65\text{세이상인구}}{15\sim64\text{세인구}}$)'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연령층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부양인구와는 거리가 멀고 체감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노년부양부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노년부양비($\frac{65\text{세이상인구}}{15\sim64\text{세인구} \times \text{고용률}}$)'와 '1인당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을 추정하였다.

■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 추정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가중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인 빈곤수준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국민은 50대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빈곤이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공식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14년 17.3%로 상승했지만, '실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6.4%에서 26.5%로 더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100명의 취업자가 27명의 노인을 부양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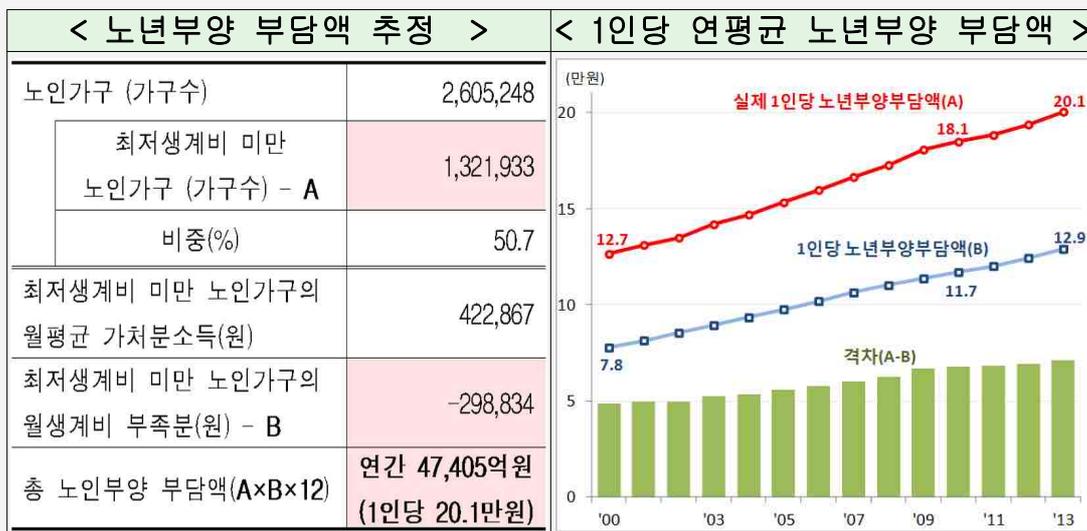


한편, 최저생계비 미만의 노인가구를 부양하기 위한 **노년부양 부담액은 연간 4.7조원(2013년)**으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이며,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은 월평균 29.9만원(연 358.6만원)으로 추정된다.

취업자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만원(2013년)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7만원에서 2013년 20.1만원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해 왔다.

■ 시사점

첫째, **노년층의 세부 유형별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능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교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성을 높이고, 근로불가능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공적이전지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산보유 노년층을 대상으로 '친 고령사회 금융상품'을 확대·보급 해야 한다. 둘째,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수준 증대**를 통해 부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청년, 여성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켜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 출산장려금,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복지 관련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립적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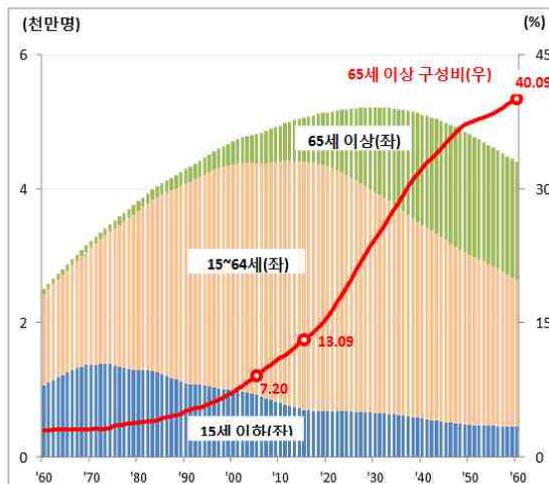


1.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 (연구배경)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노년부양부담이 가중

- 인구고령화(aging populations) :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증가하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 노년인구 : 2015년 662.4만명에서 2049년 1,799.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부양연령층(15~64세 생산가능인구) :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2016년 3,703.9만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7년부터 축소될 전망
 - 65세 이상 구성비 : 2000년 7.2%에 불과했으나, 2015년 13.1%로 상승하고, 2060년까지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고령사회1) 진입(aged society enter)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
 -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임
 - 한국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18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간이 8년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 인구구조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 주요 국별 고령화 현황 >

(단위 : 년도, 연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도달 연도	고령화 사회	2000	1942	1970	1932
	고령 사회	2018	2015	1994	1972
	초고령 사회	2026	2036	2006	2009
도달 연수	고령 사회	18	73	24	40
	초고령 사회	8	21	12	37

자료 : 통계청.

1)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

- (연구목적) 인구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노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액을 추정함
 - 실제 노년층을 부양하는 계층은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닌 취업자임
 - 노년부양비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연령층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실제 부양인구와는 거리가 멀고 체감하기 어려움
 - 특히, 15~19세, 20~24세 인구는 교육 과정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취업자 비중 및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낮음
 - 노인부양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제 노년부양비'를 추정하고, 부담 수준을 화폐가치로 확인하는 '노년부양 부담액'을 측정함
 - 더욱이, 노인빈곤 수준 및 준비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방법) '공식 노년부양비'와 '실제 노년부양비' 각각을 계산하고,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노년부양 부담액을 추정함
 - 공식 노년부양비 :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추계하고 있음
 - 실제 노년부양비 : $\text{실제 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고용률})} \times 100$
 -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 중에서도 실제 취업자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연령층 인구의 비율로 사실상의 부양부담을 보여줌
 - 노년부양 부담액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 수를 추계하고, 해당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을 연간기준으로 계산
 - 부양연령층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노인가구만을 보수적으로 측정
 - 최저생계비는 적정생활비 및 최소생활비 보다 보수적인 기준이며, 생계비 부족분을 가족관계가 없는 제 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 = $\frac{\text{노년부양 부담액}}{\text{생산가능인구}}$
 - 1인당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 = $\frac{\text{노년부양 부담액}}{(\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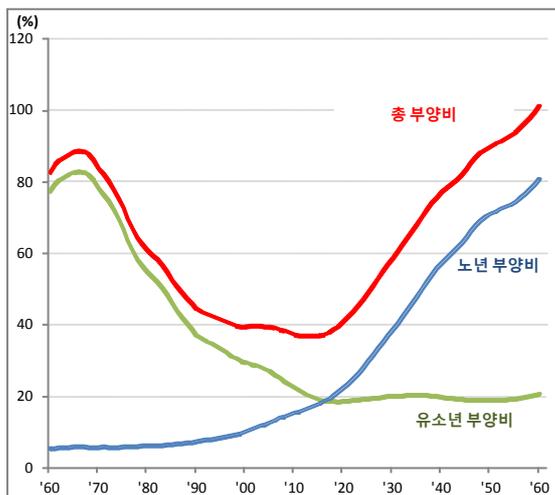
2.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 추정

(1) 고령사회 준비 현황

○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부양비 가중

- 노년 부양비(dependency ratio of old age)²⁾ : 부양연령층의 부담 가중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가파르게 증가
 - 2016년까지는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하회하다가 2017년부터 초과
 - 부양연령층의 총 부양비가 노년부양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
-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io)³⁾ :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화
 - 한국은 가임여성 1명당 1.25명을 출산하는 수준으로, OECD 평균 1.67명 및 세계 평균 2.47명에 크게 못 미침
 -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34위이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저 수준
 -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양연령층의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부양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현황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순위)

	출산율	순위	
		OECD (34개국)	세계 (224개국)
이스라엘	2.62	1위	75위
프랑스	2.08	2위	112위
영국	1.90	6위	140위
미국	1.75	14위	165위
독일	1.43	25위	202위
일본	1.42	29위	208위
한국	1.25	34위	220위
OECD	1.67	-	-
세계	2.47	-	-

자료 : UN, CIA World Factbook(2014).

2)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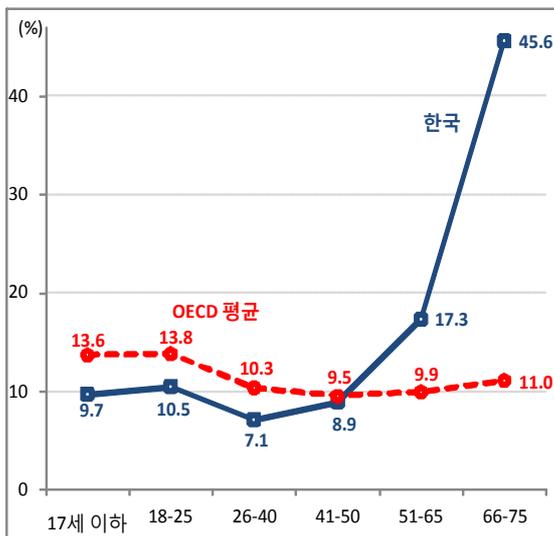
3)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

○ 노인 빈곤수준 OECD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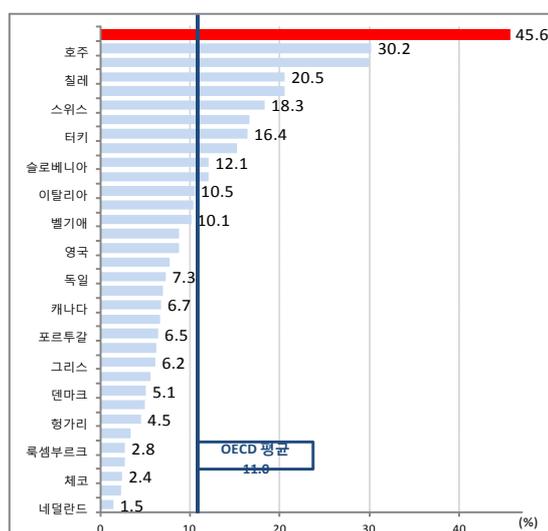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빈곤율 : 50대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빈곤 심화
 - OECD국가의 평균 빈곤율 : 41-50세가 9.5%이고, 51-65세가 9.9%, 66-75세가 11.0%로 생애주기상 고령화되면서 완만하게 상승
 - 한국의 평균 빈곤율 : 41-50세까지는 8.9%로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낮으나, 51-65세가 17.3%, 66-75세가 45.6%로 급격하게 상승
 - OECD국가의 연령대별 평균 빈곤율은 50대 이후 상승폭이 미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히 상승
 - 한국의 경우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50대 이상이 은퇴후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지만 자영업 동종업종의 과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 및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음

- 노인 빈곤율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1.0%를 크게 상회하고, 2위 국인 호주의 30.2%와도 크게 차이

< OECD-한국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 >



< OECD국 노인 빈곤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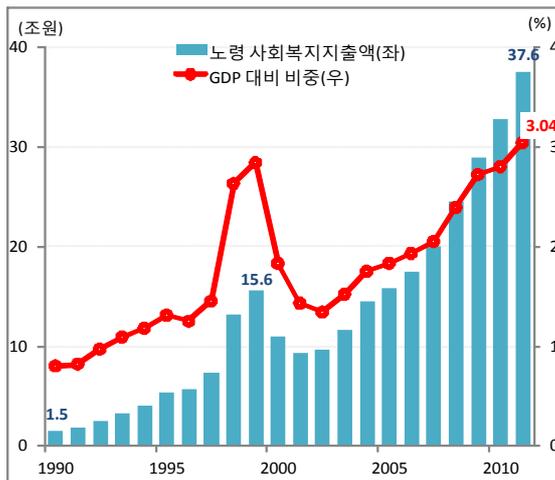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OECD(2012)자료 이용 계산.

주 : 노인 빈곤율(poverty rate)은 66-75세 기준임.

○ 노인 복지의 재정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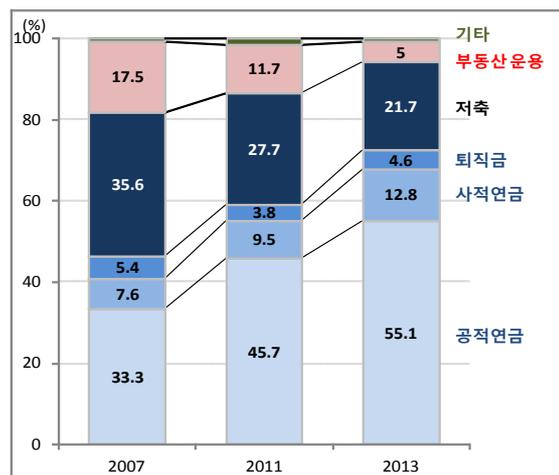
-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마련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은 1990년 1.5조원 수준에서 2011년 37.6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여 2011년 현재 3.04%를 기록
 - 노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 및 보건·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현재의 재정지출 성향이 유지된다면 재정건전성이 향후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로 연금재정 부담 증가
 -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IMF는 2010년 연차협의보고서(staff report)⁴⁾를 통해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현상이 향후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도 2050~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
- 노후준비의 공·사적 연금 의존도 확대
 - 노후준비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2007년 각각 33.3%, 7.6%에서 2013년 각각 55.1%, 12.8%로 확대됨
 - 노년층은 노후준비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연금 재정 부담 및 고갈 가능성이 증가함

< 노령 사회복지지출액 추이 >



자료 : 보건복지부.

< 노년층 노후준비 현황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호

주 : 저축에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 기타에는 주식, 채권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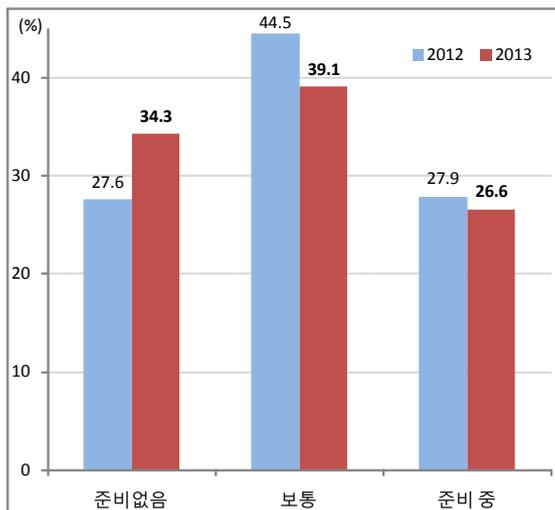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untry Report No. 10/270, 2010.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심화

-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2013년 노후준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34.3%로, 보통 39.1%, 준비 중 26.6%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구 비중은 2012년 27.6%에서 2013년 34.3%로 확대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은퇴 후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을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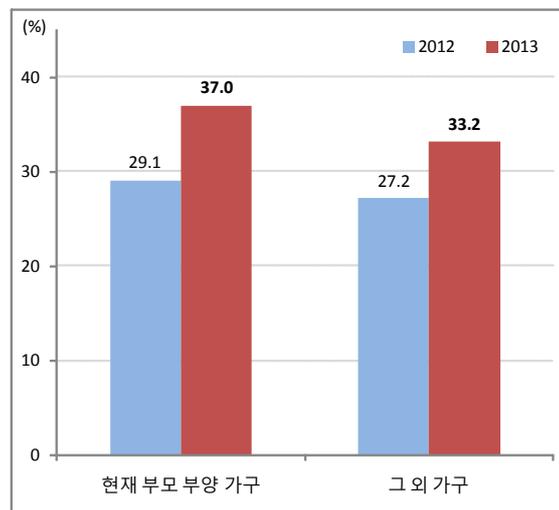
-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그 외 가구보다 높고 가파르게 상승
 -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 2013년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37.0%로 그 외 가구 33.2%보다 3.8%p 높음
 - 특히, 현재 부모를 부양 하는 가구는 2012~2013년 동안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7.9%p 상승하였고, 그 외 가구는 6.0%p 상승으로 이에 못 미침.
 -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향후 노인빈곤이 가속화 될 우려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실태조사.

< 부모 부양 여부별 '노후준비 없음' 비중 추이 >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실태조사.

(2) 노년부양부담 추정

○ 취업자 증가속도보다 노년인구 증가속도가 빨라 '실제 노년부양비'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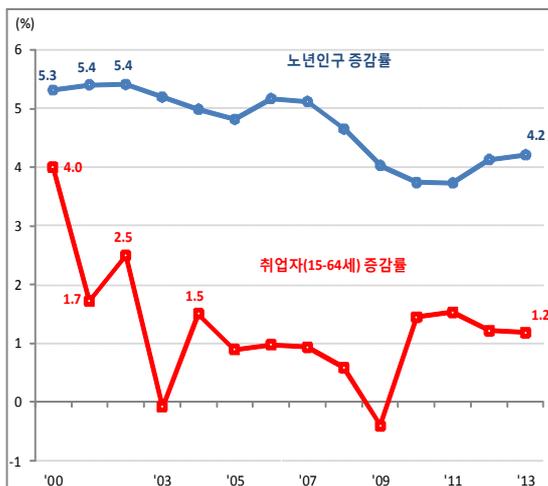
- 취업자 증감률이 노년인구 증감률을 지속적으로 하회
 - 2000년 이후 노년인구 증감률은 3.7%~5.4%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15~64세 취업자의 증감률은 2000년 4.0%에서 하락하여 이후 2.0% 미만으로 하회
 - 노년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그 속도에 크게 못미쳐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독거 노인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은 더욱 악화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경제의 노년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공식 노년부양비($\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와 '실제 노년부양비($\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text{고용률}}$)'

격차 확대

- 부양연령층(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노년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는 가처분소득이 있는 취업자로, 이들의 부양부담 즉 '실제 노년부양비'는 노년부양비보다 높음
- '실제 노년부양비'는 2000년 16.4%에서 2014년 26.5%로 상승하고, '공식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0.1%에서 17.3%로 상승해 격차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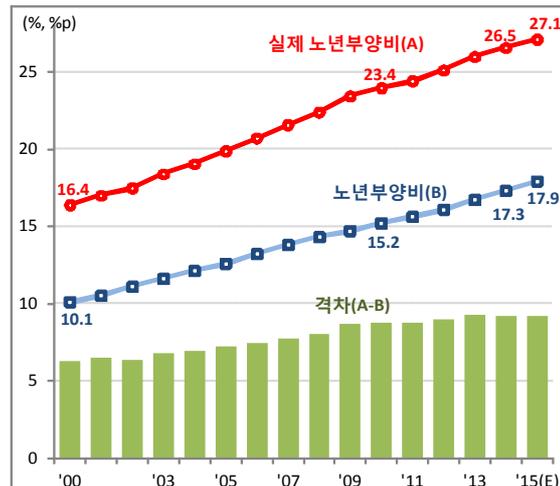
< 노년인구 및 취업자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 취업자는 15-64세 기준임.

< 실제 노년부양비와 공식 노년부양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정.

주1 : '14, '15년 고용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주2 : 실제 노년부양비=100×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고용률).

○ 연간 4.7조원의 노인가구 부양 부담

- 노인가구⁵⁾의 과반은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⁶⁾에 못 미침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50.7%에 달함
 -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중 1인가구는 약 86만 가구로 독거노인 빈곤수준이 심각한 상황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평균 생활비 부족분은 월 29.9만원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42.3만원으로 생계비 부족분은 월평균 29.9만원으로 추계
 -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미만의 1인 노인가구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33.5만원으로 월 최저생계비 57.2만원에서 약 23.7만원이 부족함
-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 부담액은 연간 약 4.7조원
 - 2013년 노인가구 연평균 생계비 부족분은 약 358.6만원이고,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총 노년부양 부담은 4조 7,405억원에 이룸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및 노년부양 부담액 추정 >

	전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노인가구 (가구수)	2,605,248	1,594,945	959,167	42,793	8,343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가구수) - A	1,321,933	857,044	435,632	20,915	8,343
비중(%)	50.7	53.7	45.4	48.9	100.0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원)	422,867	335,245	577,762	589,823	917,465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생계비 부족분(원) - B	-298,834	-236,923	-396,469	-670,492	-628,934
총 노년부양 부담액(A×B×12)	연간 4조 7,405억원 (월평균 3,950억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3)를 이용하여 추정.

5)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가구원이 있다면 부양연령층이 아닌 경우(18세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인 미혼자녀 및 손자, 손녀 등)를 말함(통계청). 부양연령층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은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부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양가족이 없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노인가구만을 보수적으로 추정.
 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1인가구 572,168, 2인가구 974,231, 3인가구 1,260,315, 4인가구 1,546,399원)를 기준으로 함(2013년 기준).

○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 증가하고 있으나 노년층 고용확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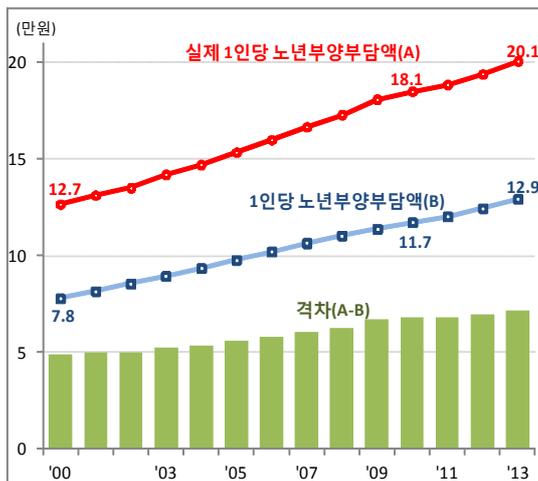
- 1인당 연평균 노년부양 부담액 : 20.1만원 부담(2013년 기준)

-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3년 20.1만원으로 2000년 12.7만원에서 빠르게 증가함
-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
-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 노년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속한 취업자(실제 부양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과 노년부양부담액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노년층 고용확대가 미흡하여 부양연령층의 노년부양 부담 확대

- 부양연령층의 고용확대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의 고용확대를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
- 최근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확대 되었고, 고용률도 개선되었지만, 노년층 고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15-64세 고용률과 노년층 고용률의 격차는 2000년 32.1%에서 2014년 34.0%로 확대

< 1인당 연평균 노년부양 부담액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정.

< 노년층-생산가능인구 고용률 격차 >

(단위 : %, %p)

	2000	2007	2013	2014
노년층 (65세 이상)	29.4	31.1	30.9	31.3
15-64세	61.5	63.9	64.4	65.3
격차	32.1	32.8	33.5	34.0

자료 : 통계청.

주 : 2014년은 1~9월까지의 평균임.

3.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부양연령층의 고용확대 및 노인복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 필요
 -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을 증대 및 고령화 속도 지연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지속,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산여건이 개선될 필요
 - 부양연령층의 고용확대 및 고용의 질적수준 증대를 통해 부양능력 제고
 - 15~64세 부양연령층의 고용률 및 근로조건을 증대하여 충분한 부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노년부양부담을 완화
 - 청년, 여성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필요
 - 실제 노년층을 부양하는 계층은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있는 취업자 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
 - 노인복지 재정건전성 강화
 - 세대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시
 - 최근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는 바,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
 - 향후 국민연금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대상을 소득수준, 자산소유 정도,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른 적절한 분배방법을 논의 하고 적용할 필요

○ 노년층의 세부 유형별로 노년부양부담 완화 및 지원방안 강구

- 근로가능 노년층 :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확대 필요
 -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public laboring project)을 확대할 필요
 -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하는 소위 가교일자리(bridge job) 마련

- 근로불가능 노년층 : 저소득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지출 확대
 -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 생애 주된 일자리에 퇴직을 함과 동시에 소득이 중단되는 '절벽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은퇴 환경 개선 필요

- 자산보유 노년층 : 연금, 역모기지 등 '친 고령사회 금융상품' 확대
 -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 제도를 적극 활용
 - 노령연금 수급조건에 소득 및 자산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국민연금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을 확대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